



2022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

2022. 6.



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Korea Youth Work Agency

2022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

I. 2022년 반부패·청렴정책 환경분석 및 추진전략

1. 추진배경

- 최근 공공부문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대국민 책임성은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지만,
- 공직자의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, 투기사태 등 공공부문의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
 - ※ ○○공사 투기사태('21.3월), ○○군청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('21.11월) 등
- 이와 같이,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'22년부터 개편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강도 높은 혁신으로 반부패·청렴, 윤리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'22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·시행 필요

< 작성방향 >

- ◆ 대내·외 환경변화 분석 및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·청렴정책 수립 필요
- ◆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·청렴실천의지를 반영한 반부패·청렴정책 수립
- ◆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,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

2. 환경분석 및 전략방향

SWOT 기반분석

		외부요인	기회요인(O)	위협요인(T)
		내부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의 강력한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공직자의 윤리의식 요구 확대 • 공공부문 반부패·청렴 혁신 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영평가 '윤리경영' 지표 비중 강화 • 부패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 요구 • 공공부문에 대한 대국민 신뢰의 저하
강점(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부패·청렴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의지 • 임직원의 높은 청렴 의식과 강력한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요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부패·청렴문화 조성·확산을 통한 전사적 청렴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•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 이미지 제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윤리경영 추진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외부 컨설팅 실시 •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제도개선 	
		역량확대(SO 전략)	선택집중(ST 전략)	
대응전략				
약점(W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별 다양한 직종·근무 형태 존재 •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내부청렴도 수준 	기회포착(WO 전략)	약점보완(WT 전략)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통·교육 활성화를 통한 임직원 청렴 주인의식 정착 •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강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간전문가 적극 활용(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확대·운영 등) • 반부패·청렴정책 성과 홍보·확산 강화 	

3. 추진체계 구축 및 전략수립

미션	반부패·청렴 및 윤리경영 기반으로 청소년을 포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'청렴 KYWA' 구현		
비전	청렴·공정·투명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혁신으로 반부패·청렴 및 윤리경영 우수기관 도약		
중장기 로드맵	2019~2020년(도입기)	2021~2022년(도약기)	2023~2024년(정착기)
	청렴·윤리경영 실행력 강화	청렴·윤리경영 혁신 기반조성	청렴·윤리경영 혁신 정착

'22년 실행과제	① 지속가능한 반부패·청렴활동 추진기반 강화	② 부패리스크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
	③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	④ 반부패·청렴문화 정착·확산을 위한 노력

실행체계	관련규범		추진체계	
			구분	역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직원 행동강령 ·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· 공익·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·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· 부패방지지침 및 반부패·청렴문화 혁신을 위한 다짐 ·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	내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임임원(경영진) · 비상임감사 · 청렴시민감사관 · 청렴감사실 · 노동조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렴·윤리경영 의지와 원칙천명 ·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제시 · 주요사업, 부패행위 감사요구 등 ·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·시행 ·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실시(청렴감사실 합동) 	
		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반부패 자율협의회(14개 기관) · 광역단체(서울시) 청렴사회 민관협의회(64개 기관) 	
환류·평가	내부	· 조직진단, 부패리스크평가, 경영검토 등	· 임직원 청렴인식 설문조사(자가진단 포함)	
	외부	· 종합청렴도평가(국민권익위원회)	· 비상임감사, 청렴시민감사관	

4. 추진계획 수립 과정

- '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각급기관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요청(4.29., 국민권익위원회)
 - ※ 종합청렴도 평가 '청렴노력도' 평가지표 중 '반부패 추진계획 수립', '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및 성과' 지표평가에 활용
- '22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(안) 의견수렴(5.20.~31.)
 - 내부구성원, 외부전문가(비상임감사, 청렴시민감사관) 의견수렴
- '22년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·제출(~6.20까지)

II. 2022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과제 실행계획

○ 평가대상기간: '21. 11. 1. ~ '22. 10. 31.

※ 종합청렴도 평가 '청렴노력도' 평가지표 중 '반부패 추진계획 수립', '반부패 추진 계획 이행 및 성과' 지표평가에 활용

○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과제 구분

◆ 국정과제	국정과제
◆ '22년 반부패·청렴정책 추진지침(국민권익위원회) 중점 추진과제	중점 추진과제
◆ 민생·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대책	공정성제고
◆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	이해충돌방지
◆ (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) 부패취약분야 개선계획	취약분야 개선
◆ 반부패·청렴정책 성과의 대내·외 홍보·확산	성과홍보·확산
◆ 내부구성원 및 외부전문가(비상임감사, 청렴시민감사관)의견수렴 사항 반영	의견수렴 반영

1 지속가능한 반부패·청렴활동 추진기반 강화

1 민간전문가(청렴시민감사관 등) 참여의 확대 중점 추진과제

-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확대·운영('22.5월~)
 - (구성) 법조계 및 반부패·청렴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
 - 부패취약분야 등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 의견제시(계기 시)
 - 타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(계기 시)

2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 및 모니터링 강화

- 타 공공기관 간 교차감사제 운영 등을 통한 감사자원의 공유로 감사품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반부패·청렴활동 추진계기 마련(계기 시)
- 외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청렴도 개선방안 논의 및 반부패·청렴시책 공유 등 실시(계기 시)

3 윤리경영 추진 종합전략 수립 취약분야 개선

- 부패방지경영시스템(ISO 37001) 인증획득('21.11월) 후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('21.12월, 기획재정부 배포) 117문항(300개 체크리스트)에 기반을 둔 윤리경영 추진 종합전략 수립('22.5~7월)
 - ※ 부패취약요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부패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모색 등 실시

2

부패리스크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

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**중점 추진과제**

- 주요정책, 법령 제·개정에 따른 권고과제의 적극이행(연중)
 - ※ 평가대상 기간('21. 11. 1. ~ '22. 10. 31.)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및 기존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(전년도 미 이행 과제 포함)
-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등 행위에 따른 각급 기관의 제재처분(지급중단, 부정이익 등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, 명단공표 등)에 대한 기록·관리 의무규정(회계규정 내 반영) 마련(~'22.10월)

5 기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부패취약분야 발굴 및 제도개선 적극추진

취약분야 개선 **의견수렴 반영**

- 부패방지 제도개선을 위한 제규정 일제정비 실시('21.12월)
- 청렴체감도 측정예정 업무분야*별 관계자 대상 이사장 명의 청렴서한문 발송을 통한 투명한 기관운영 의지천명(계기시)
 - * 대상분야: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, 프로그램 공모사업, 계약 및 관리(구매·용역·공사 등)
-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·회계관련 제규정 정비(계기시)
-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안내·상담·교육의 강화(계기시)

6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내부 견제시스템 강화

국정과제 **공정성제고** **이해충돌방지**

- 공직기강 확립 및 취약분야 중점개선을 위한 내부견제활동 강화(연중)
 - 우월적 지위남용(갑질), 부당한 업무지시, 부정청탁, 금품수수, 업무추진비 오·남용, 목적 외 예산집행, 이해충돌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
 - ※ 해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사실시 예정
 -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후속조치(제도개선 등)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
 - 외부강의 등 신고 현황 정기적 점검(분기별)
 -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(명절 등) 등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(4회 이상, 계기 시)
- '22년 자체 종합감사를 통한 부패행위 사전예방 실시('22.5월)
 - 취약분야, 중요분야에 대한 적법성·효율성·공정성 등 점검

7 부패행위 사전통제 및 반부패 실효성 제고 인건수렴 반영

- 임직원 대상 청렴인식 설문조사를 통한 기관 내 부패인식수준 진단('22.5~6월, 외부전문업체 위탁)
- 공익·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 관련 내부규정 정비(~'22.10월)
- 진흥원 업무 과오사례, 감사결과(외부기관감사 등) 공개(계기시)

3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중점 추진과제 이해충돌방지

8 이해충돌방지 교육운영, 담당관 지정 등을 통한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

- 임직원 대상 'KYWA 이해충돌방지 안내서 배포'('21.12월)
- 임직원 대상, 기관 LMS시스템을 활용(청렴연수원 코스웨어 연계)한 사이버 교육 형태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실시('22.4~5월)
※ '2022년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(국민권익위원회)'상의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운영
-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교육·상담, 신고접수·처리 등 이해충돌방지 업무의 전담을 위해 청렴감사실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('22.5월)

9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정비

-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('22.5월) 및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~'22.10월)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('22.5월)에 따른 운영지침 제정 및 행동강령 내 중첩되는 조항 삭제

4 반부패·청렴문화 정착·확산을 위한 노력

10 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한 KYWA 운영

- 임직원 대상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퀴즈 이벤트 및 청렴한 KYWA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실시('22.5월~)
- 기관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위한 청렴교육 내부강사 양성 교육수료('22.4월, 2명)

11 이사장 및 부서장 이상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취약분야 개선

- 이사장 및 부서장 이상 고위직의 강력한 반부패·청렴의지 실현(연중)
 - 노·사가 함께하는 KYWA 청렴·윤리경영 혁신 TF 운영을 통해 개원 이후 10년간 청렴수준 정밀분석, 외부사례 조사 및 실무직원 직접소통(인터뷰 등)을 통한 KYWA 청렴·윤리경영 혁신방안 도출('21.11월)
 - ※ '22~'26년 중·장기 감사, 청렴·윤리경영 계획에 반영완료('21.12월)
 - 비상경영대책회의, 월간·주간회의 등 임원 주재 각종회의(계기 시) 및 국립수련시설 현장방문 시 청렴의지 피력
 - 청렴소통간담회, 임직원·협력(계약)업체 대상 이사장 명의 청렴서한문 발송, 상임임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(2시간 이상 등) 실시
 -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실시(수시)
 - 부서장 이상 고위직의 사적인 요구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 등 전파(계기 시)

12 반부패·청렴문화 정착·확산을 위한 실천 중점 추진과제 성과홍보 확산

- 민·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(계기 시)
 - 광역단체(서울특별시)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파트너 기관 간 반부패·청렴 시책 공유 및 청렴사회협약 이행을 통한 반부패·청렴문화 확산
-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한 반부패·청렴 정보공유·확산(연중)
 -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원에서 추진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에 대한 우수사례의 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부문으로 공유·확산
- 반부패·청렴정책 홍보를 통한 반부패·청렴문화 정착 확산(계기 시)
 -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제도,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등 반부패·청렴정책에 대한 홍보(기관매체 이용, 캠페인 등)를 통한 반부패·청렴문화 확산